

한국 낙농의 현실적 좌표와 정책구상



한국낙농유가공기술원 원장 이 만재

2022년8월22일 월간 낙농지 기고문

지난 7월 미국 최대 낙농협동조합이자 유가공사업체인 아메리카 낙농가협동조합(DFA, Dairy Farmers of America)이 동북부 지역의 일부 낙농가들로부터 제소당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 이 소송은 버몬트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그 귀추가 흥미롭다.

이 소송의 발단은 DFA가 유가공사업을 확장하면서 A등급 원유 값을 지불하는 낙농가의 이익보다 원유를 사서 유제품을 만들어 파는 가공사업의 수익에 더 비중을 두어 원유가격을 싸게, 즉 조합원들에게 지불하는 원유가격을 낮게 결정하는 데 대한 조합원인 낙농가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데서부터 시작된 사건이다.

마치 서울우유 조합이 가공사업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조합원의 유대를 올리지 않고 낮은 가격으로만 사겠다고 하여-현실적으로 그럴 일이야 절대 없겠지만- 서울우유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국의 낙농가들과 유가공업체들간의 원유가격 결정문제를 두고 힘겨루기 씨름하는 현재의 양상과 닮은 점이 있어 짚어 보는 거다.

DFA는 약1조3천억 원 정도의 빚으로 은행 부도를 맞게 된 미국 최대의 유가공업체의 하나인 딘 푸드(DEAN Food)의 유가공 사업 부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원유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튼 원유가격을 두고 유가공 측과 원유생산 측이 충돌하는 양상이 한국의 현재 상황과 근본적인 문제는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이다. 이 낙농가 조합원들의 집단소송에 대하여 DFA의 수석부회장 코디(Kristen Coady)는 “DFA는 낙농가 조합원에 의해 설립되었고, 낙농가 조합원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며, 낙농가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이 소송은 그러한 자신들의 조합에 스스로 피해를 끼치는 소송은 터무니없고 불합리하고 명백하게 틀린 행동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다음 세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다.”라고 소견을 발표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낙농선진국들의 낙농산업구조는 우유 생산자인 낙농가들에 의해서 설립된 낙농협동조합들이 우유를 생산하여 자신들이 경영하는 유가공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한국의 낙농가들도 그 많은 선진지 견학 때 가 본 우유공장이나 우유생산 현장들이 대부분 낙농협동조합들에 의해 낙농가들 스스로가 운영하고 있음을 보아왔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다.

위 DFA도 미국 최대 낙농생산지대인 오대호 아래 미네소타+위스컨신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랜도 렉스(Land O'Lakes) 낙농협동조합과 함께 미국 우유생산의 주류를 이루고 이는 낙농협동조합이다. 미국 외에도 뉴질랜드의 폰테라, 일본의 유끼지루시, 프랑스의 노르망디, 덴마

크와 스웨덴의 알라, 핀랜드의 발리오, 노르웨이의 티네 등과 같은 서방세계 선진국들의 모든 낙농 협동조합들이 우유생산과 유가공업의 80~90%를 점하고 있다. 이들 나라 낙농가들은 거래교섭상대가 유가공업체가 아닌 소비자와 정부당국인 셈이다. 한국 낙농가들은 약6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적 유업체와 협상을 해야한다. 한국의 낙농산업구조는 낙농선진국과는 매우 특이하고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낙농가들이 원유를 가지고 거래를 교섭 할 수 있는 힘은 미국의 DAF와 같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인 서울우유와 부산우유 정도인 39%밖에 없다. 21년6월~22년5월 1년 서울우유와 부산우유 집유량으로 보면 약39%다. 그 외 30%는 유가공업체가 원유를 직접 사기 때문에 그쪽 납유 농가는 거래교섭력이 아예 없다. 나머지 31%는 정부가 지배력이 있는 낙농진흥회에 속한 군소 집유 조합들이다.

그래서 해마다 우유가격결정 시기가 되면 낙농가들의 전국규모 단일 결성체인 낙농육우협회는 힘없는 교섭력 대신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나 하는 전 근대적인 행태로 전락하였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낙농가 단체들의 구호를 보면 그냥 막연하게 “농정독재” “낙농기반사수” “사료값폭등 다 죽는다” 등으로 참으로 맥없고 한심한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소비자도 학계도 정부도 유업체도 언론도 아무도 관심이 없는 나 홀로 광야의 외침이다. 왜 그런가?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 본 적이 있는가?

진정으로 유대를 인상해야 한다면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명 기록들을 가지고 합리적인 협상을 해야한다. 우유소비자들이나 정부에서 볼 때 큰 외제차를 몰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외국여행을 밥 먹듯하는 일부 낙농가들의 모습을 볼 때 누가 우유값을 올리는데 동의 할까? 필자가 최근 낙농 마이스터 후보자에 오른 목장을 심사하기 위해 여러 목장을 조사한 적이 있다. 그 중에는 지역 낙농가 리더격인 조합장 출신, 낙농계장, 낙농경영지도자 강사 출신의 과연 경력만 봐도 지도자급의 낙농가들이었다. 그 목장들 중 목장의 수입지출을 기록하는 기초장부는 물론이거니와 자기목장의 유사비 조차 제대로 파악하는 낙농가는 한 사람도 없었다. 물론 젊은 후계자들은 낙농경영관리 앱을 깔아 철저히 잘 기록도하여 ICT낙농경영으로 스스로 분석하는 능력있는 낙농가도 있을 것이다. 낙농가들이 과연 자신들의 생존권과 낙농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면 제대로 된 무기와 실탄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지난 50년의 낙농발전 역사에서 국내 낙농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낙농진흥법을 제정하고 수급안정을 위하여 낙농가들이 생산한 원유가 공급 과잉되었을 때 적극 개입하여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도저히 감당이 안되어 생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생산할당제(쿼터제도)도 도입하여 수급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하였고 수입개방 이후 가격경쟁의 절대 열세인 국산원유의 가공용 원유에 대한 용도별 차등가격 적용제 도입을 시도하기도 하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모든 정책적 노력의 목적은 생산기반의 유지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규정한 낙농진흥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온 것이다.

1970년대 말까지는 박정희대통령이 직접 낙농문제를 챙겼다. 그때는 우유 수요 러시가 진행되고 있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원유가격을 결정하였고 나머지 모든 유업체들은 서울우유가 올리는 대로 따라서 올렸다. 그때마다 조합장은 대통령에게 편지로 우유값 인상에 대하여 상소문을 보냈고 필자가 그 편지를 청와대로 전달하는 담당자였다.

80년대에는 우루과이라운드로 낙농시장 개방문제와 우유소비시장의 성장둔화, 우유생산량의 급증 등으로 낙농산업의 성장보다 수급 안정이 정책방점이었고 그에 대응하는 우유생산쿼터

제, 집유일원화, 검사공영화, 중앙낙농협의회(낙농진흥회)설립 등의 제도적 방안들이 서울우유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90년대에 그러한 제도개선 방안 중 낙농진흥회 설립, 원유 검사공영화 실시, 원유생산 쿼터제 도입 등이 실현되었고 집유일원화만 실패하여 30%만 집유일원화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2000년대 초 FTA협상이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낙농시장개방이 약 25년후인 2026년에 모든 유제품이 낙농강국들인 미국, 뉴질랜드, EU 등에 완전개방, 관세철폐 되도록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정부의 낙농담당업무는 옛날 박정희대통령이 직접 챙기던 낙농산업이 아니고 다양한 산업의 세계시장으로의 발전으로 세계 경제10위권의 강력한 글로벌 시장 주역의 한 국가로 성장된 그 시장 속의 작은 산업으로 간신히 남아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은 여전히 국가적 주요산업의 하나로 인정받고 낙농진흥법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다만 그 옛날 주먹구구식 유대의 인상과 청와대 후견으로 힘쓰고 떼쓰던 낙농산업은 없어지고 이제 스스로 살아갈 길을 자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그동안 제안해 온 낙농제도의 개선안은 필자도 이미 20여년 전부터 늘 주장해 온 바였고 현재의 가격제도, 특히 가격연동제로는 결코 한국의 낙농이 지속가능성은커녕 생존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진작 개선되어야 할 일이었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현재 낙농가의 입장에서는 거래교섭력이 없다. 시위하는 낙농지도자들이 납유거부도 불사하겠다고 큰소리치지만 아무도 겁내지 않는다. 거부자체가 불가능하고 하더라도 이틀을 못 넘기기 때문이다. 지금 낙농가 단체와 그 지도자들은 무조건 시위농성을 중단하고 협상장에 정치적인 쇼가 아닌 진정한 낙농발전을 위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그러한 모습이 소비자나 정부나 직접적인 협상 당사자인 유가공업체들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협상결과를 도출해 낼 힘이 되는 것이다. 지난 주말 텐트농성을 풀고 정부와 협상에 임할 자세로 전환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앞으로 협상에서도 합리적인 주장으로 설득력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성실하게 실리적 협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골자로 한 제안 내용은 많은 고심과 연구 끝에 현시점에서는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낙농가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 최근의 사료가격 폭등과 낙농 부산물가격의 하락에 따른 소득의 감소를 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안을 좀 더 보강하여 낙농가들의 불안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낙농정책의 변화, 즉 낙농제도 개편이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폭등한 사료가격과 경기침체에 따른 물가상승 등의 악재와 맞물려 원유가격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낙농가들에게만 그 손실이 몰려오는 듯하여 낙농가들의 불안과 불만이 고조되어있기 때문이다.

<원유가격 제도개선 문제>

우선 전체적인 낙농산업의 가치를 배분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낙농가들의 소득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지난 21년6월부터 22년5월까지 1년간 낙농가들이 납유한 총원유량은 2,007,425톤이었다.

이를 원유대 평균 1,100원/Kg으로 보면 전체 낙농가들이 수취한 돈은 2조2천82억 원가량이다. 이 기간 평균 낙농가 호수가 4,625호이니 농가당 약4억8천만 원이 유대로 지급되었다.

월 약4천만 원이고 이 중 유사비가 35%라면 약1천4백만 원이 사료비로 쓰였고 일반적인 농업 소득 약 30%로 보면 약1천3백만 원이 월 소득으로 추정될 수가 있다. 추측컨대 약80%이상의

낙농가가 이 범주 안에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있는 낙농가들이 불원 가장 먼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낙농가들이 생산한 총 유량 중 같은 기간에 약137만톤이 백색시유, 28만톤이 가공시유로 소비되었고 발효유가 57만톤, 치즈가 18만톤으로 소비되었는데, 이 중 가공시유와 발효유, 그리고 치즈의 소비 제품 중에는 탈지분유, 버터오일, 커어드 등 수입원료 또는 완제품이 대부분 소비된 것으로 추정하면 약165만톤이 백색시유와 함께 국산원유로 손실없이 판매 할 수 있는 총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190만톤을 현재 가격으로 유지하고 그럼 나머지 약20만톤을 가공용 가격으로 보고 있다. 이 안이 제시된 시점과 지금은 상당한 변동이 있다. 그 사이 실제 생산 총량으로 10만톤 정도의 원유가 감소되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2022년8월현재 기준으로 165만톤 정도를 수입개방이후 경쟁력있는 원유가격으로 조정하고 35만톤정도를 가공용 가격으로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가공용 원유가격을 정부는 600원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약700원수준이면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 유제품 시장으로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EU의 평균유대가 약500원~600원대이고 여기에 해상운임, 통관비용, 보세창고비 등의 수입제비용이 제품가격에 30%정도 가산으로 보면 실제 국내 유통가격은 700원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계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환율의 급등을 고려하면 추가로 수입가격은 더 높게도 될 것이다.

그럼 국산 원유의 가공용 용도별차등가격으로 700원/Kg을 설정하고 정부가 200원/Kg 정도를 보전해 줄 의지가 있다면 실제 낙농가에겐 35만톤의 가공용 용도별 차등가격으로 지불되는 원유대의 손실은 약200원/Kg이고 이는 총700억 원이다.

이 금액을 165만톤의 시유와 신선유제품 용도별 가격에 이전해주면 시유용 원유가격은 약42원/Kg이 더 되고 이를 인상해 주면 전체 낙농가들의 총 유대 수입은 같게 되어 낙농가 입장에는 손실이 없다. 소비자가격 인상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있겠지만 한국의 우유소비자 가격이 다른 물가에 비하여 결코 높지 않음을 인식한다면 물가당국도 수긍하리라 본다. 서울우유가 유대인상 간접효과로 낙농경영지원비로 50원/Kg 가량 선지급하기로 한 것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DFA조합원들보다 서울우유조합원들이 좀 더 현명한 것일까?

이 계산은 현재 수준으로 보아 그렇고 향후 점진적인 국산 원유의 국내수요가 감소되고 낙농가의 절대수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체적인 정부의 예산부담도 점차 감소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러나 다음으로 현재 낙농가들이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원인으로 사료가 인상으로 이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원유가가 언제 안정될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일시적인 과제로 보고 정부, 유업체, 낙농가가 다 같이 1/3씩 어려움을 나누어 가지기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젊은 후계자들이 장래 큰 희망을 가지고 축사구조개선, 사육시설확장 등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에겐 특단의 조치로 금융비용의 감면, 지원 등의 조치가 후계양성과 낙농생산기반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서 낙농가의 적정 낙농소득은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낙농생산기반의 유지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소비자, 정부, 유가공업체 모두에게 인식되고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3배가 적정하다고 보며 이는 스위스의 정부가 낙농가에게 잘 지켜주는 수준이기도 하다. 낙농가는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1년 중 170일이상(공휴일140일, 년월차15~30일, 휴가3~5일 등) 쉴 수 있는 도시근로자보다 두 배

이상 더 힘든 일을 하고 하루 노동시간도 새벽 4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므로 도시 근로자에 비하여 두 배 정도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면 국민소득 \$40,000인 나라에서 누가 낙농업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게 반문이다. 2022년도 3인가족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620만원으로 정해져있다. 그렇다면 낙농가의 월소득은 1,860만원이 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이는 70두의 착유우를 사육하는데 자가노동력이 최소 2명이므로 실제로는 1.5배정도로 볼 수 있다. 낙농소득은 일반적인 농업소득과 같이 기업 이윤과 달리 자가노동비, 자기자본이자, 자기토지보상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소득보장은 우유값을 올려서 하는게 아니라 적정 규모를 보장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줄임으로서 달성되게 하는 것이 향후 한국낙농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적정규모에 대하여는 뒤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럼 왜 다른 산업에 없는 소득보장을 정부가 낙농가들에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주지하는 사실이므로 설명을 하지 않겠다. 다만 선진국으로 남아있기 위해서 낙농은 필수불가결의 국가적 기반산업이라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면 된다.

우유는 가성비가 식품 중 가장 좋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지난 40년동안 체험하였다. 최근 코로나 사태 때에도 모든 음료시장이 위축되어 있을 때 백색시유는 오히려 소비가 소폭 증가한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약국에서 어떤 음료나 드링크제도 절대값으로나 영양적 가성비로나 우유보다 싼 게 없음을 소비자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들이 우유를 큰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값을 판단하는 기준을 대중교통비와 비교하여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물가 당국이 우유가격을 물가 상위지표에 설정해두었다더라도 이를 수정하여 그 판단기준을 재설정해두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다시 한번 더 말하면

첫째, 우리나라 우유의 소비자 가격은 경제 수준에 비하여 비교적 싸고,

둘째, 도시근로자보다 세 배 이상 더 많은 일을 하는 낙농가들의 소득을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을 해 주어야 할 확실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우유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낙농가들의 원유판매 수취가격을 말하는 것이지 소비자가격은 아래에서 설명한 대로 그렇지 않다. 어느 지역의 가격을 평가할 때 절대 수치로 비교한다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우유는 생산원료인 사료를 90%이상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생산한다. 짚도 생산수단인 기계화의 연료, 다수확을 위한 비료 등 모두 100% 원료를 수입해서 생산하므로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생산비를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짚이 비싸다고 하는 소비자는 없다. 현재는 짚보다 우유, 유제품의 국민1인당 소비가 더 많다. 문제는 수입개방에 따른 가공 유제품과의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없다는데 있으나 시유의 소비자 가격에는 다르다.

정부 물가조사에 의하면 물가인상율이 21년도 5.9%, 22년도 7~8%로 예상되므로 이는 낙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정부가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재고해 줄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와 낙농가 그리고 유가공업체의 협상이 시작되면 종전의 가격연동제는 접어들 것이지만 현재의 시유가격을 국민생활 전체를 두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필자가 30년 전부터 늘 주장해 오던 거지만 우리나라 시유가격은 비교적 싼 편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누구나 흔히 한국 우유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거리낌 없이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은 낙농가에게 지불되는 원유가격이지 소비자 가격에는 심히 왜곡되고 잘못된 말이다.

필자가 30년전 우유생산쿼터제도, 집유일원화 등의 새로운 낙농제도 도입을 위해 지금은 그 명칭이 바뀌었지만 당시 영국 MMB(Milk Marketing Board)를 방문하여 그 나라 낙농제도를 공부하면서 원유 수급 담당과장에게 영국의 원유 적정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그의 답변은 영국도 그 문제가 제일 어렵고 골치 아픈 일이라면서 설명하기를 자기들은 영국 시민들이 우유한잔(약200ml)을 마시는 값이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한 구간 값이나 가판대 일간신문 한 부 값과 비슷하게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영국시민들이 별 부담없이 지불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고 누구도 불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시민들도 그렇다고 공감된다. 그 이후 필자는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 도쿄 등 낙농 선진국들의 지하철 값, 신문가판대 값,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파는 백색시유 값을 가는 곳마다 조사하여보았다. 과연 그의 말이 맞았다. 지금도 외국 여행을 가면 습관처럼 그런 조사를 해 본다. 틀림이 없다. 자, 그럼 한국의 소비자 우유값은 어떤지 따져보자. 원유구입가의 절대 치숫자로만 비교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그러나 소비자 가격은 비교적 싸다. 백색시유 소비자 가격은 1,000ml에 약2,800원 정도다. 200ml 다섯 잔이므로 5를 나누면 한 잔 값은 560원이다. 일간신문 한 부 값 1,000원, 시내버스 전철 한 구간 값 1,200원이다. 교통비가 워낙 고가인 도쿄의 우유값이 우리와 비슷한 전철 한 구간 값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었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별 부담 없이 지불하는 가격들이다. 우유도 매일 그 정도의 값으로 마실 수 있는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시유용 원유가격을 약5%정도 인상하고 소비자가격은 2.5%이하로 인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그 근거는 21~22년 식료품의 물가인상이 약 13%정도이고 사료가격인상요인을 유사비35%로 적용했을 때 낙농가들이 약 절반의 손해를 감내하고 소비자들도 낙농가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수준이 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격을 2.5%이하로 억제하는 것은 원유의 원가부담 비율을 적용해서다. 그래도 더 유가공업체들의 경영개선을 지원할 정책적 고려를 한다면 첫째, 학교급식과 군급식에 우유를 전면 무상으로 하되 현재와 같은 200ml포장을 없애고 20리터용 벌크우유팩으로 학교와 군 부대마다 학생들이나 군인들이 아무 때나 얼마든지 자유롭게 마시도록 냉장우유 디스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학교와 군부대에서, 주한미군의 매스홀에서도 시행하는 방법으로 포장 원가절감과 더 많은 우유를 학생들과 군인들이 마실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목표다. 둘째, 기능성 또는 향미제나 다른 식품원료를 첨가한 기호성 제품 외에 순수한 요구르트 즉, 대용량 발효유 제품-이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에 대하여는 국민건강, 특히 유당불내증 노인들의 건강을 위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시유와 함께 부가세를 없애 줌으로서 이의 소비를 확대시켜 노인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공업체들의 영업시장을 확대하고 전체적인 국민건강도 증진시킴으로서 고령인구들의 의료비 등 사회간접자본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낙농 생산기반의 적정규모 유지문제>

우선 한국의 낙농생산기반은 국산 원유의 수요 시장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2022년8월 현재로서는 앞서 산출한 대로 시유와 가공유 등의 소비 규모가 약165만톤, 발효유와 생치즈 등 신선 유제품의 소비 규모가 약35만톤으로 보면 결국 190만톤/년 정도이다.

현실적인 통계로 볼 때 2021년6월~2022년5월 1년간 전국 원유 집유량은 200만7천톤이었고 같은 기간 전국 낙농가수는 평균 4,625호였으니 낙농가 호당 납유량은 1,189Kg/일 이었던 기

준으로 위에서 산정한 국산원유의 실 수요량인 190만톤에 적절한 낙농가는 4,378호이다.

정부는 낙농발전계획과 정책방향을 설정 할 때 수입개방에 의한 국산원유시장의 점진적 감소, 환경문제에 의한 낙농가의 절대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낙농 생산기반의 목표범위를 설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유제품 시장개방 후 불원간 가공용 원유시장은 대체로 80%이상 수입 유제품으로 대체되어 약 5만톤, 시유, 신선발효유 등 이 160만 톤 정도로 보면 전체 국산 원유의 수요는 165만톤으로 감축 설정 할 수 있다.

이때 생산을 감당 할 적정 낙농가 수를 설정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낙농가의 경영규모와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착유우 규모를 70두, 두당산유능력을 35Kg/일, 10,700Kg/305ME로 한다. 일일 납유량이 약2.5톤수준이다. 이때 이 농가가 유사비 35%, 낙농소득 30%일 때 월소득은 약2천4백만원정도이다. 현재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소득의 4배정도가 된다. 만일 3배인 1천8백만원 정도로 조정한다면 원유대를 850원/Kg으로 낮출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원유대 인하는 불가능하겠지만 원가 억제 수단은 충분할 것이다.

165만톤의 국산원유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규모와 생산 능력을 갖춘 낙농가는 1,845호가 필요하게 된다. 이 예측은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과 예측으로는 2033년 쯤에는 이런 수치가 현실화 되리라 본다. 이것은 낙농생산기반의 붕괴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이나 시장개방 등에 잘 맞추어진 매우 현실적인 규모이다.

그에 따른 낙농가들의 전국적인 조직개편은 필수적이다. 특히 서울우유와 부산우유는 전국 낙농가를 하나의 조합으로 흡수하는 작업을 착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우유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세균수, 체세포수 모두 1등급 원유로 신선한 시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시판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향후 신선유 시장에서 이를 공개하여 다른 유업체들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그것은 165만톤의 국산원유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천적 노하우이다. 필자가 이미 수차례 강조하였지만 낙농진흥회는 이러한 수단을 통하여 집유일원화의 발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위에 열거한 낙농가들의 규모 확대와 생산성 증가를 위한 매우 전문적이고 확실한 기술지도와 정책적 지원을 서울우유와 함께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우유의 입장에서조차 진흥회와 함께 집유일원화를 추구함으로써 존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 조합이 아닌 일반 유업체들은 수입유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제품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국산 원유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도 여전히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되고 원유가격도 상당 기간 억제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공시장 전체가 활발하게 확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낙농가의 생산규모, 즉 유우군 확대다. 대체로 현재의 규모보다 약 두배로 늘리는 것인데 그 문제는 어차피 소규모낙농가와 도시근교 환경문제, 노령화로 후계자가 없는 낙농가들이 차례로 먼저 소멸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영호남지역의 비교적 지리적 환경상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낙농지구로 지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향후 10년 동안 착유우 70두규모의 낙농가가 약500호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므로 약1,000개 농가에 대한 규모확대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전개하면 된다. 특히 새로운 낙농지구 대상지로 DMZ부근의 민간인 통제구역과 같은 지역은 기후와 토양조건이 낙농가에게는 매우 유리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군당국과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와 같이 시설과 토지를 정부가 마련해 주고 젊은 후계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세련된 낙농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정책적 배려는 젊은이들에게는 낙농경

영에 접근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고 원유 생산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장점도 있다.

어떤 낙농 선진국들도 FTA협상에서 자국의 낙농 생산 기반이 허물어져도 상관없이 낙농시장을 확 열어 준 나라는 한국밖에는 하나도 없다. FTA를 내세워 가장 자유시장 개방을 외치며 큰 소리 치는 미국조차도 자국의 낙농 생산 기반이 위협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걸 보지 않아도, EU, 일본, 스웨덴 등의 낙농국들이 하나같이 자국의 낙농 생산 기반을 보호하려는 정책적이고 국가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쌀보다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이 더 많아진 우리나라도 낙농 생산 기반을 유지해야 함은 당연한 국가적인 가치관이고 정당한 태도이다. ♣